

도민들 '충격과 공포' 지역경제 붕괴 불 보듯

지역사회, 폐쇄방침 철회 희생방안 마련 촉구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5월말 폐쇄하기로 했다. 전신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지 15년이 지나 내린 결정이다. 군산을 넘어 전북지역 경제에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던 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은 200만 도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기 충분했다. 공장폐쇄로 군산공장 근로자 2200명(지역·사내협력)을 비롯해 1차 협력업체 5700명(35개), 2차 협력업체 5000명(101개사) 등 1만2900여명의 일자리가 위태롭게 됐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 파탄은 불 보듯 뻔하다. 지역사회는 연일 폐쇄방침 철회와 희생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엠은 오는 5월 말이 되면 최소한의 관리 직원만 남기고 '쉐보레의 도시 군산'을 뒤로하고 기약없이 떠날 것이 확실하다. 이에 지엠과 동고동락했던 지난 15년과 폐쇄 방침 이후 노사외 지자체의 노력, 향후 방안, 지역경제 상황 등을 재점검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군산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129만㎡의 부지에 연간 27만대 규모의 완성차 승용차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26만대의 차량을 생산하며 최고점을 찍은 뒤 쉐보레 브랜드 유럽 철수와 세계 경기 침체, 내수판매 부진 등으로 생산물량이 지속해서 감소해 위기가 깊어졌다. 이번 폐쇄 결정은 군산공장에서 출시되고 있는 주력 차종인 준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인 '올란도'와 준중형 차량인 '올 뉴 크루즈'의 내수와 수출판매가 줄면서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쉐보레의 도시 군산

지엠은 지역의 대표적 항도기업으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산 수출의 50%, 전북지역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기업 중 한 곳이다. 공장의 위기로 철수설 등이 불거지자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군산 상공인들은 앞다투어 'I love 쉐보레'를 외치며 지엠 차 애용 운동에 팔치며 응원하는 손길을 보였다. 일부 소상공인은 "군산은 쉐보레의 도시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군산공장 정상화를 염원하기도 했다.

▲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지역경제 붕괴

공장폐쇄는 군산지역 실업률 증가와 지역상권 몰락, 부동산가격 하락, 인구유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공장이 위치한 오식도동의 숙소와 식당, 카페, 주점 등에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다. 거리 곳곳에는 임대와 매매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하다. 시민들은 현 사태에 대한 막연한 분노와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말 그대로 도시 전체가 '꽤나' 상태다.

▲전북도와 군산시, 정치권 '지엠 정상화' 한목소리

전북 지자체와 사회단체 등은 연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 촉구'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엠을 압박하고 있다.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공장 가동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군산시는 '지엠 군산공장 대응 TF 팀'을 구성해 체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군산시의회도 '성명서'와 '촉구문', '건의문' 등을 내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철회와 신차물량 배정과 전기차 부품 생산라인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20만 500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한국지엠 본사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재만 전 전북도의회 의원과 장현철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 디트로이트 지엠 본사 등을 방문해 '군산공장 폐쇄'에 관련한 항의시위를 열었다.

▲떠나는 근로자와 남은 근로자

군산공장의 구조조정 프로그램(희망퇴직) 대상자(사무직, 생산직) 가운데 70%에 달하는 근로자가 퇴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오는 3월말과 5월말 두차례에 걸쳐 회사 문을 나선다.

▶ 폐쇄 결정 이유는?

출시되는 주력 차종 '올란도' 등 내수·수출판매 줄어 가동률 감소

▶ 지역을 먹여살린 GM 군산공장

군산 50%·전북 수출 30% 차지 위기론 등 불거지자 시·의회 상공인 앞다투어 차 애용 운동 펼쳐

▶ 공장 폐쇄의 영향

실업률 증가·지역상권 몰락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져

▶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쓸쓸'

희망퇴직 대상자 중 70% 이달 말·5월 말 회사 문 나서

100여개 달하는 협력업체들 배정 물량 감소로 '경영난'

▶ 항의 그리고 지원책 발표

한국지엠 본사 등에 폐쇄 철회 촉구 서명부 전달

박재만 전 도의원 등은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 방문 시위하기도

정부,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키로

전북도, 특별자금 긴급 투입 관세청, 피해기업 특별 세정지원

▶ 향후 방안은?

시민단체 '근로자 삶 정책 반영'

폐쇄 따른 기업 인수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GM)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날 14일 오전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디트로이트 GM 본사 자동차노동조합 앞에서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각) 박재만 당시 전북도의회의원(왼쪽)과 장현철 군산공장 비정규직해고비상대책위원장이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회사에 남아 투쟁을 이어가는 동료들이 애잔하다"는 50대 근로자는 "지엠을 떠나기로 한 뒤 모임 등에서 모두 탈퇴했다"며 쓸쓸한 표정이다. 그는 "퇴직을 결정한 뒤 혼자라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앞선다"면서 "두 달 가량 남은 기간에 출근을 많이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투쟁을 이어가는 근로자들은 서로가 위로하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역경을 이겨내고 있다"면서 희망퇴직 근로자와 관련 "회사 폐쇄 때까지는 같은 조합원"이라며 노노 갈등은 현재까지 없음을 강조했다.

○GM 협력업체들 "외국 파견근무라도" 기대 가동률 저하에 따른 재정 손실을 이유로 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100여개에 달하는 1·2차 협력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회사들로 배정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업체는 대부분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올란도와 크루즈 AS 부품과 KD(부품)를 수출해 현지서 조립·판매하는 방식) 물량을 생산해야 하기때문에 마이너스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1차 협력업체 공장장 A씨는 "부품사는 생산

을 멈출 수 없어 운영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협력업체 근로자 B씨는 "자신들은 자동차 전문직으로 연계업종 취임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일본 등 인력이 부족한 외국 자동차 부품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간절함을 전했다.

▲한국지엠, 사회공헌 멈출 수 없어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이 사회공헌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군산공장은 불우이웃돕기, 조손가정 돕기, 다문화가족 결혼식, 감정감치 담금 행사, 오토사 이언스클럽, 글로벌영어클럽, 복지재단 무상차량, 불우·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 벚꽃축제(4월) 스파크 1대 경품, 전북지역 사회복지재단(9월) 스파크 4대 무상지원, 군산시민의날 경품(9월) 크루즈 1대, 군산대·호원대학교 학생 20명 장학금 100만원씩 전달, 군산 '뜻있어 신통진짚' 본사 및 군산공장에 연 50만 원 구매 등 사회적 기업으로 책임을 다했다.

특히 공장 폐쇄 이후에도 뜻있는 근로자들이 모여 회사의 지원 속에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 전북도 등 앞다투어 지원책 발표

정부는 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군산을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과 함께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특별교부세와 전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특별자금을 긴급 투입해 도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경영 안정화를 꾀하고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계청은 지엠 사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 전북도교육청은 지엠 실직자 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등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충격을 완화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

▲향후 정책과 방안은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원의 핵심은 고용지원, 일자리 창출, 직업능력개발, 산업체 지원 등 고용 촉진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의 삶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의 노동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실직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생계비와 주거 안정대책 등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엠은 군산공장 매각을 전제로 한 폐쇄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이 인수하게 될지 또다시 글로벌 기업이 인수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이 과정에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지엠 측과 유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급선무다.

지난 15년간 사회적 기업으로 역할에 충실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미래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군산=김광근 기자